

# 공동체성 지향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정책적 쟁점

배화숙

부산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 An Analysis of Community Service Investment Project by the Framework of Output Analysis and Policy Issue

Hwa-Sook, Bae

Dept. of Social Welfare and Counseling,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요약** 본 연구는 사회복지서비스에서 비중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의미 있는 발전을 위해 필요한 논의가 무엇인가를 찾고자 하였다. 산물분석 틀을 이용하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내용을 분석하고 사업을 구성하는 사회적 선택의 근거가 되는 가치를 축으로 분석하였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내용과 가치 분석을 토대로 도출한 정책적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금보다 더 '지역'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둘째, 시민의 개별성에 초점을 맞추는 사회복지서비스가 더 중요해질수록 주민참여에 기반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사회의 '공동체 형성'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목표 수정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역주민의 의사결정 통로 부재, 소득 기준 대상 선정, 사업명칭에서 '투자'라는 용어의 적절성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

**주제어**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공동체, 지역화, 사회복지서비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discuss what is needed for meaningful development of social service, focusing on Community Service Investment Project(CSIP). The contents of CSIP were analyzed on applying the Analytic Framework by N. Gilbert and H. Specht and the values that were the basis of social choice. Based on the analysis of output and policy value of this Project, this study draws three social service policy issues. First, 'localization' is needed to be emphasized more in CSIP because there are few programs that take into account the regional peculiarities. Second, as the social services focused on the individuality of the citizen is more important, it is necessary to examine 'sustainability' of CSIP. Third, in relation to the community building,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modification of the CSIP's goals. As process for improving community, it is needed to review for local residents not participating in decision-making process, income-based user selection and appropriateness of the term 'investment' in the project name.

**Key Words** : Community Service Investment Project, community, localization, social service

Received 16 November 2015, Revised 20 December 2015  
Accepted 20 January 2016  
Corresponding Author: Hwa-Sook, Bae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Email: peacebhs@cup.ac.kr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1. 서론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 중 최근 그 비중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제도가 사회서비스이다. 넓게는 공공행정, 아동과 장애인 등을 위한 사회복지, 교육, 문화를 포괄하는 서비스를 지칭하기도 하나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와 같은 사회보장제도 바깥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복지 활동을 사회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순수 민간 자원에 의해 제공되는 것을 제외하고 민간 영역이 참여하고 있지만 사회보장제도와 같이 기본적으로 국가의 운영 책임성을 기반으로 움직여지는 서비스 공급 활동이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사회서비스 확대과정의 구체적인 성과물이며 사회서비스 내용의 포괄성을 확보하는 동력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활용하게 되어 이용자들이 사회서비스의 운영 구조와 급여형태의 급격한 변화를 직접 경험하게 만든 사업이기도 하다.

기존 취약계층 보호를 중심으로 했던 사회서비스는 2012년 개정된 사회보장법에서는 그 개념을 확대하여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정의하였다. 범조항에 의하면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범위 밖은 모두 사회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명시적 바우처를 적용하는 사업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등 8대 사업이 있다. 그 중 하나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가사간병방문지원과 함께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묶여진다. 2015년부터 지역발전특별회계 전환에 따라 사회서비스 포괄보조(block grant)가 제도화되어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시·도가 세부사업의 예산편성을 한다[1]. 정책설계와 집행, 평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했다는 것은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2].

지방자치단체에게 사업 기획 및 집행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는 목적은 무엇일까? 중앙정부 중심의 공급체계는 주민의 다양한 서비스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잠재적인 서비스 이용자인 지역주민을 중심에 두는 공급체

계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포괄보조형태 전환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목표 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인가에 대해, 국민 삶의 질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영역으로서 사회서비스가 확대되는 가운데 프로그램 내용과 운영구조가 명시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목표를 달성하게 하는가, 그리고 명시적인 사업 목표를 성취하고 있는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게 한다. 이것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예산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장기적으로 볼 때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운영의 안정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과도 연결된다.

한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목표가 적정인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서비스 접근성 문제, 사회서비스 일자리 질의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있지만[3,4] 목표 그 자체에 대한 비판적 검토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공공성 위기에 대한 연구[5] 등은 사회서비스의 본질적인 목표에 대해 재검토할 수 있는 화두를 던져준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목표가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과 가시적 성과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사회서비스를 통해 실현하려고 하는 ‘가치’를 고려하지 않게 하고 개선된 사회의 모습을 기대하지 못하게 한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가치, 즉 궁극적으로 이루려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검토하고, 국가의 지원과 관리 속에서 성과를 무엇으로 볼 것인가를 다시 질문하기 위해 문제를 제기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진 본 연구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의 증가와 욕구의 다변화 속에서 적합하게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논의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출발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내용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목표를 재발견하기 위해 탐색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산물분석을 토대로 사회서비스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그 결과를 토대로 궁극적으로 지향해야할 방향을 모색하는 전 단계로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운영과정에서 논의되어야 할 정책적 쟁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2. 선행연구 검토

### 2.1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가치

아동, 노인 대상의 돌봄이 사회서비스의 주요 영역으로 자리 잡는 것을 시작으로 사회서비스는 다양화되고 그 운영 규모는 크게 확대되었다.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에서 사회서비스의 폭 넓은 정의는 이러한 변화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기존 사회보장제도가 구 사회위험에 대한 기본적 보장이라면 사회서비스의 확대는 다양한 욕구에 대하여 최소 수준을 넘어서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OECD의 자료를 통한 국제비교에서 가족에 대한 사회서비스 지출이 출산율 증가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와 노인에 대한 사회서비스는 의료비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볼 때, 사회서비스는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거나 노인 돌봄 비용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는 기능을 기대하게 한다. 그런데 사회서비스의 추세에 대한 원종욱 외(2000)의 예측은 부분적으로 빗나갔다. 사회보험지출이 급증하고 사회서비스가 바우처 형태로 아동과 노인에 집중되고 있기에 현금급여나 사회서비스 급여 증가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였는데[6], 총 사회복지지출에서 사회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현재 20%를 상회하고 있다. 한편 아동과 노인이 주 대상이라는 전망은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예산 규모는 커졌으나 사회서비스의 주요 대상자는 확대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보면 예산 증대가 반드시 사회문제 해결의 포괄성 강화와 정비례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 수 있다.

사회서비스의 공급 그 자체만으로는 사회 전체의 복지를 증진시키지 않는다. 전달 과정에서 불충분한 전략은 사회서비스 공급의 본래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서비스 공급구조를 결정할 때 민간기관 의존도를 높이게 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공공부문의 직접적 서비스 공급역할이 미미한 상태에서 민간 비영리기관에 과도하게 위탁하는 방식이나 영리부문의 진입을 체계적인 규제 장치 없이 허용하는 방식 모두 서비스 품질 관련 문제를 양산한다는[7] 연구 결과는 서비스 공급구조에서 부정적 단면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사회서비스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는 무엇인가? 사회서비스는 국가의 전반적 사회정책 목표 실현과 같이 해야 하는데 이를 반영하여 유럽 국가들은 공익적 사회서비스라는 용어를 공통적으로 사용하여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며, 형평성과 사회적 연대라는 가치를 강조한다[8]. 연대성의 개념

은 모든 타자들이 개인화·타자화 되는 현재 사회관계 속에서도 도덕적 가치이념을 통해 자신들의 차이를 상호의존의 근거로 삼아 공동행위의 의무와 책임을 자발적으로 부담하여 인간 해방의 힘을 창출하고 정의의 상태를 조성하는 행위양식이라 정의할 수 있다[9]. 가치와 관련하여 제도를 구분하면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등이 형평성, 재분배 가치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면 사회서비스는 관계성을 강조하고 자발적으로 문제해결의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사회연대에 무게 중심을 둔 제도적 성격을 보여 준다.

사회관계 속에서 상호의존을 기초로 하는 사회 연대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서는 공동체성, 지역화 등의 특성과 관련된다. 김은정(2014)은 사회서비스는 지역에서 일상을 영위하면서 형성하게 되는 관계망(network)과 생활 현장(field)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할 것을[2] 강조한다. 사회서비스 정책이 지나치게 개인단위로 분절되어 개별적 돌봄 욕구 충족만을 목표로 하고 있고, 주민이 이용자로만 머물거나 개인적 필요를 개별적으로 충족시키는 구조로 사회서비스가 운영되면 사회서비스 공급의 터전인 지역사회가 물리적 공간으로서만 작동하고 지역 유대감, 공동체성 성격을 담고 있는 지역사회는 오히려 위축될 수 있다.

김형용(2010)은 열악한 사회서비스 노동 문제를 지적하며 자립적 지역공동체에 주목한다[3]. 시장중심의 저임금 일자리는 궁극적으로 생활세계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사회적 유대를 약화시킴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서비스 공급의 토대를 붕괴시키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 민간 조직이 서비스 공급의 책임 주체가 되어 사회서비스를 공급할 것을 제시한다. 이는 타인의 욕구에 대한 집합적 개입 방식이 아니라 자립적 지역공동체의 재건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3].

사회서비스의 공동체성에 대한 논의는 지속가능성의 기반이 되는 지역화 논의와 연결된다. 사회서비스의 지향점으로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공동체성을 주제로 한 연구 중 이해진·김철규(2014)는 지역사회문제 해결과 사회통합 등 공익추구를 목적으로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과 공공자원을 활용하여 민주적 운영과 책임성에 기반을 둔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와 공급자간 상호신뢰를 통해 보편적 이해당사자들의 욕구와 지역사회의 필요를 실현하는 과정으로 공공성을 규정하였다

[10]. 그리고 사회서비스의 시장화와 지역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공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복지 활성화를 주장한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회서비스의 '지역화'에 대한 논의는 사회서비스의 운영 권한과 책임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행정구조적인 것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사회서비스의 개발과 운영에 대한 것이다. 김은정(2014)에 의하면 사회서비스의 지역화는 사회서비스 정책 포트폴리오 설계 자체에서 지역의 자유재량권을 증가시켜 사회서비스의 내용과 재정지원방식, 급여대상 선정이나 평가 방식 등 정책설계 전반에 지역 주도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접근할 수 있다 [2]. 지역화를 위해서는 지역의 개별성에 비추어 기존 사회서비스 제도들을 지역인지적 관점으로 재평가하고 재구조화하는 것에서 [2] 시작할 수 있다.

지역화 논의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논의와도 연결된다. 히라노 타카유키(2011)는 관료제 조직 하에서 사회복지 제도의 구조는 획일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큰데, 개인의 정체성 상실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제도와 협동하면서 지역복지가 확대 발전한다고 [11] 주장한다. 새로운 '정책으로서 지역복지 추진'을 위해서는 양자의 대립 또는 어느 한쪽이 종합화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자율적으로 협동하는 관계가 이상적이며 따라서 지역복지의 독자성을 확보하면서 사회복지제도와와의 협동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지역복지의 추진 과제라고 [11] 하였다.

지역복지의 대표적인 급여 형태인 사회서비스에 대하여 위 논의를 적용해 보면 보편성 기반의 사회보장제도에만 의존하면 낮은 급여수준, 획일화된 급여로 개인 혹은 지역의 필요를 적정 수준으로 충족시킬 수 없는데, 그럼에도 제도적 복지 수준이 낮다고 하여 사회서비스로 일상적 삶을 보완하는 것은 사회서비스의 지속적인 공급에 과부하가 일어날 것이며 욕구 변화에 따른 새로운 사회서비스 개발을 어렵게 할 것이다. 사회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와와의 균형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서비스 민영화를 중심으로 지속가능성의 문제를 언급한 김형용(2010)은 현재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과정에서 민간영역을 시장영역과 동일시하는 오류를 지적하였다. 공공서비스의 민영화가 시장 의존도를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작용하면 공공-민간의 협치를 파괴하고 사회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고 공급자를 육성한다는 목표에도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한다. 수요자의 선택권을 위해 공급자 총량을 늘리는 것과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공급자 간 경쟁을 유도한다는 것은 일면 당연한 순서인 것 같다. 그러나 사회복지 욕구는 고정성과 가변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에 시장경쟁 원리에 의한 운영에 의존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공급자 중심 구조가 만들어지기에 사회서비스에서 지속가능성 확보를 어렵게 한다 [3].

## 2.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현황과 기능

바우처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 예산은 연간 1조원을 넘어섰고 그 중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국비 기준으로 2015년 예산은 2,136억 원에 이른다 [1]. 지역자율형 서비스 사업 중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체 개발사업으로 사업 수요에 따라 자치구 간, 자체 개발사업 간 예산을 자율 조정하여 운영된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역사회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해 지역별 여건 및 수요 등을 고려한 사회서비스 개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목적으로 2007년 국고 보조사업으로 시작되어 양적 측면에서 급속히 성장하였다. 초기 개별보조방식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 운영을 위해 2012년 포괄보조 방식으로 전환하였고 [12], 2015년부터 지역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 사업으로 운영하여 시·도는 지출한도에 따라 자치구의 사업수요를 파악하여 예산을 신청하여 운영되는데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예산 대비 74.2%(1,584억 원) 규모를 가지고 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포함되어 있으며 돌봄 중심의 사회서비스 영역을 다양화하고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사업이다. 최근까지 사회서비스는 빈곤정책의 한 부분으로 일부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국가 정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여 중앙정부 주도로 사회서비스 정책을 설계하고 전국적 표준화가 우선이었는데 [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사회서비스의 무게 중심을 이동하거나 복수화 하는 기능을 한다.

돌봄서비스 중심의 평가결과를 통해서 볼 때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서 경쟁을 통해 공급시장 확대나 품질을 높이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영리기관 증가

로 인한 품질 저하와 공급인력의 고용 불안 증가 때문이다. 돌봄 서비스처럼 비교적 표준화 되어 있는 서비스도 품질 향상이 어려운데 개별 사업의 표준화가 어려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통제가 더욱 어려울 것이고, 비용효율성은 낮아질 것이다. 즉 사회서비스 공급구조와 관련하여 특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서는 적절한 공급기관 확보와 수요자 선택권 보장을 넘어서는 보다 근원적인 동력을 찾게 하는 관점이 필요하다.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적절한 자원배분과 성과측정이 필요하지만 앞서 지역이 갖는 공동체성에 새롭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의 가치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논의해야 할 쟁점을 도출하는 것이 본 연구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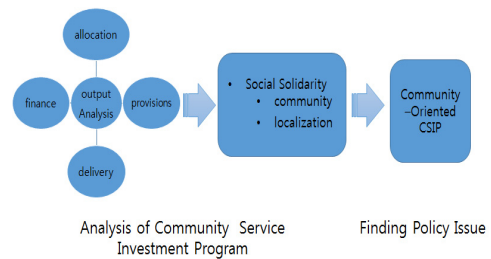
### 3. 연구방법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바우처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 중 하나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다. 사회서비스의 주요 영역인 노인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등은 보편적인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이라 할 수 있는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시·군·구, 시·도가 자체 개발하는 사업으로 지역 특성과 주민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 충족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성격이 다르다. 최근 사회서비스의 확대과정과 운영구조에 대한 논의는 많이 이루어졌으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초점을 맞춘 것은 이용자 만족도, 성과, 서비스 품질 등에 관한 연구 등에[13-16] 그치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목표, 운영구조에 대한 논의는 많지 않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정책 내용을 구성하는 사회적 선택의 이유를 설명하게 될 가치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는 본 연구는 먼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사회적 선택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할당 원리, 급여형태, 재원, 전달전략 등 산물분석 틀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산물분석 결과의 내용을 결과를 토대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지향하는 가치와 운영 과정에서의 현실적 차이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분석 자료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대한 정부 지침 자료, 연구기관 보고서, 학술 논문 등을 검토하였다.

사회서비스를 포함하여 사회복지정책은 단순히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가치와 신념의 영향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선택과 대안의 근거가 되는 사회적 가치를 축으로 고찰하고자 하는데[17], 사회서비스의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사회연대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적용하여 공동체성, 지역화와 관련하여 정책 쟁점을 도출하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운영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함의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Fig. 1] Research Framework

### 4.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분석

#### 4.1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산물분석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개발하여 대상자에게 바우처를 제공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할당의 기반은 가구 소득이 기준이 된다.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서비스 대상과 내용에 따라 이용자 선정 기준은 다르다. 노인과 장애인 대상 사업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영유아발달지원 서비스, 아동정서발달 서비스, 정신건강 케어 서비스 등은 발달평가나 청소년 심층사정평가도구 등을 이용한 검사 결과 일정 기준 이상인 이들과 의사 소견서 발급 가능한 자들이 서비스 대상이 된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서 서비스의 할당은 소득 수준과 전문가 진단 성격을 가진 욕구 수준에 기반한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주 재원은 정부지원금이 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운

영 포함),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각각을 내역사업으로 두고, 보건복지부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 지자체에서 예산을 자율편성하여 집행하게 되는데 국고보조율은 서울 50%, 지방 70%이다[1]. 이용 수수료 성격의 본인부담은 소득계층과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어 면제에서 전체 비용의 약 18%까지 부담하는데, 서비스 최대 이용 시 본인부담은 월 10만원 미만으로 정해져 있다. 아동 대상 서비스는 본인부담금을 소득수준에 따라 기준 가격 대비 10~40%로 차등화하고, 저소득층 지원 필요성이 높은 서비스 외에는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하지 않는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급여 형태는 각 지역에서 개발한 서비스이며 공급과 수요 관리 방법으로 바우처 시스템을 이용한다. 전달체계에 보건복지분야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관리, 정보화 지원 및 품질 관리 등을 주 기능으로 하는 사회보장정보원의 하위 조직으로 바우처 본부가 있다. 바우처 사업 및 정보화 중장기 전략 수립, 바우처 제도 관련 정책지원, 바우처 운영·관리, 바우처 적정급여 관리 체계 구축·운영,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와 서비스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관은 시·도 사회서비스지원단이다. 지역사회서비스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사회서비스의 품질 향상 및 지역밀착형 조직의 필요에 따라 설립된 서비스지원단은 수요의 다양화를 위해 사업개발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방안을 모색하는 기능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직무교육, 서비스 제공 인력의 경력과 자격증, 이용자 수 등 정보 공개, 지역사회서비스 홍보 등을 수행한다.

이상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관련 기관들이 평면적 전달체계를 보여주는 것이라면 서비스 접근성, 인력의 전문성, 서비스 수요의 충족성 등은 서비스 전달 전략을 입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서비스 공급환경 측면은 지역사회서비스의 물리적 접근성, 인력의 적정성, 원활한 공급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획일적인 현금급여와 달리 개별화된 대상자의 욕구 충족을 위해 서비스 내용을 개별화하고 다양화하는 것이 사회서비스 정책의 주요 가치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중요하다고 설명하는 박세경(2014)은 사회서비스 수요와 공급의 지역 간 격차 연구에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이 대

부분 지역에서 노인인구 밀집지역과 중첩(match)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나 노인의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불균형함을[4] 보여주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공급인력에 대해 간접적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홍성운의 연구(2014)를 보면, 서비스 제공인력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에 대한 질문에 64.7%가 전문성 강화교육이라고 응답하였고 서비스 전달과정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이용자 확보 어려움’ 42.6%, ‘과도한 행정업무’에 14.7%가 응답하였다[12]. 제한된 지역의 조사결과이지만 현재 사회서비스 공급 인력의 전문성이 충분히 확보된 것이 아니며, 공공의 감독 과정에서 기관은 행정업무의 부담으로 품질관리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님을 보여준다. 지척이 없다는 것을 운영상 어려운 부분으로 지적한 것은 수요자 중심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고 이용자 확보가 어렵다고 한 것은 서비스 내용 결정이 수요자 중심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공공기관이 프로그램 선정과 재정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으나 각 지역에서 개발된 서비스는 대부분 계약관계를 통한 민간 기관이 공급하고 있다. 사회보장의 기본인 소득보장과 의료보장과는 분리된 성격을 가지고 고유의 기능을 확대하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 있다.

#### 4.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가치분석

사회정책은 가치전제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며, 가치는 특정 사회적 선택이 왜 이루어졌는가를 밝히도록 돕는다 [17]. 사회서비스는 다른 사회정책과 마찬가지로 이 원칙을 수용하며 가치 분석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정보를 찾을 수 있다. 사회서비스의 핵심 가치인 사회적 연대를 증진시키려는 노력은 개별 지역사회라는 장과 연결되면서 공동체성, 지역화라는 가치와 관련된다.

사회서비스가 확대된 배경으로 제시된 내용은 양극화와 사회적 취약계층의 증가가 사회서비스 수요를 확대시켰고, 서비스 구매력이 낮아진 이들을 위한 공공 지원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지원을 통해 양극화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적 연대의 가치와 관련된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는가를 검토하는 것은 사업 목표 분석으로 시작할 수 있다. 지역사회서비스투

자사업의 명시적 목표는 첫째, 새로운 사회적 위험 등 환경변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 둘째, 취약계층 보호 외에 인적자본 형성을 통한 예방적 복지 필요, 셋째, 일자리 창출을 통한 능동적 복지의 구현이다. 돌봄의 사회화가 불가피한 가운데 취약 계층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사회서비스 구매력을 보전하며 빈곤층 전략 예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1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목표는 사회서비스의 개별적인 수요자의 필요를 채우는 것과 사회서비스의 가치에 비추어 보면 부수적 성과로 보아야 할 일자리 창출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회적 연대, 지역의 공동체성 등에 대해서는 목표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

취약계층의 지역사회서비스 구매력을 보전하는 것은 전체 사회의 공동체적 성격을 간접적으로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취약계층 삶의 질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서비스의 내용이 이용자 수요와 일치도가 높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프로그램 기획과 선정과정에 수요자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공식적 절차가 없다는 점에서 높은 일치도를 기대할 수 없게 한다. 한편 돌봄 중심, 아동·노인 중심의 지역사회서비스가 직접적으로 빈곤예방 기능을 할 수 있을 지 의문이 들고 따라서 빈곤 예방이 사회서비스의 목표로 적절한가 묻게 된다. 그래서 명시적 목표를 넘어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국가예산을 투입 하도록 만드는 묵시적 목표에 대한 탐색도 필요하다.

다음으로 명시적 목표와 별개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구성하는 각 요소들은 공동체성, 지역화 등의 가치에 영향을 받는가 살펴보고자 한다. 지역사회서비스의 할당 기반과 전달 전략은 공동체성의 가치에 의해 영향을 받은 사회적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 앞서 언급한대로 지역사회서비스 이용 대상은 서비스 욕구 정도와 소득 수준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해당 서비스 이용 대상으로 적합한가에 대한 전문적 진단 성격의 조건은 제외하더라도 소득 수준으로 이용 대상 여부를 구분하는 것은 사회통합성을 저해할 수 있다. 최저생계비 기준이 아니라 평균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이용가능 대상자는 공공부조 대상자 폭을 넘어서게 되지만 결과적으로 사회서비스 비용을 부담하는 납세자와 수혜자를 분리하게 된다. 여기에 본인부담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용하고 있어 범주적 공공부조 성격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다.

전달전략 측면에서도 공동체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지역사회서비스 기획은 서비스 공급 기관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으나 프로그램 선정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하에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한다[1]. 관과 서비스 공급자 주도적인 과정에서 서비스 이용자들이 상호의존을 기초로 서로에 대해 의무와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지역 공동체성의 영향을 받아 운영된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공급은 대부분 민간 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경쟁원리를 강조하면서 민간 영리 기관 참여를 확대하는 것은 사회복지가 가진 공동체적 정신에 배치되는 시장경제와 사회복지 서비스를 무리하게 연결 짓는 측면이 있다[17].

일자리 창출을 명시적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데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문제와 일자리 질의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걱정하지 않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않은 채 일자리 창출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서비스 공급자와 이용자 간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의 고용주와 고용인 관계 간 공동체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 볼 수 없다. 이런 문제점은 사회서비스 공급에서 수요자 중심이라고 하는 것과 대치되고 사회서비스 공급을 통해 지향해야 할 가치를 희석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런 면에서 일자리 창출은 지역사회서비스 활성화의 부수적인 성과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지역화는 추상적인 사회적 연대 가치를 구체적인 현실로 끌어 내릴 수 있는 장으로서 지역사회와 관련되어 있다. 지역사회는 지속적인 공동체성을 구현할 수 있는 바탕이라고 할 수 있다. 김미숙 외 3인은(2015) 서비스 연계 촉진 요인 연구에서 공공영역이 서비스 연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18] 설명했다. 그러나 공공주도성에 대한 의론은 사회서비스의 지속가능성에는 일정부분 동력이 될 수 있으나 공동체성을 통한 지역사회 주도적 기반 형성에 적극적 기능을 하기는 어렵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보면 수립주체는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으로 되어 있으나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하고 신규 사업의 확정도 보건복지부가 승인하도록 하여 공공주도적 성격이 강하며, 효과적인 예산배분

과 중복지원 방지차원이라지만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 주도성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포괄보조사업으로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예산 집행과 성과를 평가하겠다는 지침이 있지만, 개별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지역주민의 필요와 일치 정도에 대하여 성과로 인정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내용은 없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지역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반영하는 것은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의 몫이 된다.

현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핵심 대상은 아동과 노인이다.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했는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각 지역별로 아동 대상 서비스 프로그램을 비교해 보았다. 지역별 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6대 광역시를 비교한 결과 2015년 현재 부산 333개, 광주 196개, 대전 188개, 대구 157개, 인천 121개, 울산 82개 단위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아동 대상 프로그램의 사업 명에 따라 구분한 사회서비스는 5~6 종류로 압축되고 가장 많은 종류를 제공하는 광주는 지역사회아동 돌봄, 아동청소년 문화예술집중 등 10개 종류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 서비스명을 통해 프로그램 성격을 가늠해볼 때 아동의 일반적 특성과 필요를 고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지역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했다고 보기에는 미흡하다.

지역화란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고 공급하는 과정에 서비스의 생산과 소비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지역 특성의 반영을 포함하는 것이다. 그리고 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 수혜자라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사회의 문제 발견과 해결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역사회서비스 프로그램은 예산 범위와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이 스스로 지역문제를 규정하고 문제 해결 노력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지역화를 이루지 못할 때 지역문제 해결 주체로서 상호의존보다 제도에 대한 수혜자로서 의존만 존재하게 되어 오히려 공동체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지역자체 개발 사업을 독려한다고는 하나 지역주민 스스로 제기한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이 없고, 또한 기존의 서비스의 주요 대상이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아동, 노인으로 대부분 제한되어 있다는 것도 지역화의 가치 실현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5.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정책적 쟁점

위 분석결과를 통해 사회복지 고유의 가치인 사회 연대와 관련하여 공동체성과 지역화를 기준으로 검토하고 가치 실현을 위해 필요한 내용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산물과의 간격을 확인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쟁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공동체성 지향을 위해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서 지금보다 더 '지역'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지역자율형 서비스로 분류되고 있으나 명시적 목표에서 지역화에 대한 내용이 없고, 신규 프로그램의 최종 결정권이 보건복지부에 있으며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정한 유형의 프로그램이 중심이 된다. 해당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전달되는 급여와 차별성이 없고, 사회서비스가 가진 고유 기능보다는 사회보장제도가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의 보완 기능 정도에 머물게 될 것이다. 단순한 물리적 지역 차이도 사회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19] 보면 지역에 대한 고려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일정한 수요 창출을 위해 수요를 발굴해야 한다는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개발하기 위해 표준화된 매뉴얼을 개발하고 보급해야 한다는 제안 등은[3,4] '지역'사회서비스의 본래 기능과는 모순되는 것이며 사회서비스의 명시적인 목표가 가진 모호성이 낳은 결과의 단면을 보여준다. 지방정부가 서비스 제공주체인 민간복지기관과 실질적 의미에서 협치관계를 형성하고[7], 수요자의 필요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여 사회서비스의 지역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보장제도를 넘어서서 시민의 욕구에 대한 개별성에 초점을 맞추는 사회서비스가 더 중요해질수록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단순히 안정적인 예산 확보 차원을 넘어서서 사회서비스를 통해 충족시켜야 할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다양해지는데 단절 없이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프로그램 개발과 선정에서 수요자와 소통하는 구체적인 절차가 없는 상태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공급자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고 할 수 있으며, 대부분 민간주체로 공급되는 사



회서비스의 품질 관리를 시장원리를 통해 하고 있다는 것은 수요자 입장에서 볼 때 지속가능한 서비스를 보장 받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 급여 전달을 담당하던 기존 비영리 법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변화하는 욕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공급기관들의 진입이 쉽지 않은 것과 시장 논리에 의한 영리부문 공급기관 비중이 높아가는 것 둘 다 경계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사회의 '공동체 형성'과 관련하여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의 목표 수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지역화와 지속가능성과의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도 한데, 대규모 예산과 함께 확대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가 제시함 목표에서 빠져있는 부분이 바로 지역사회의 공동체 형성이다.

최저소득계층을 넘어서서 사회복지 대상을 확대하였음에도 빈곤전략 예방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과 가구 평균소득 기준으로 대상자를 확대하였으나 여전히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근본적인 수정을 검토할 수 있다. 빈곤예방이 사회복지서비스의 목표가 되면 주된 빈곤 원인인 사회구조적 문제에 대해 접근하는 다른 사회제도나 혼재됨으로써 실질적인 빈곤 원인을 해결하는 것을 약화시킬 수 있는 한계도 있으며 무엇보다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와 비이용자를 빈곤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수혜자와 비용부담자로 분리하게 되어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

소득 기준으로 이용자를 선정하는 것은 수요자의 욕구에 초점을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를 통해 이용자를 구분하는 과정은 이용자의 사회복지 이용 권리성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공급측에서도 수요자의 필요가 아닌 이용 가격을 기준으로 하향된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도록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서비스 공급 인력이 저임금 일자리에 고착되고 있어 사회복지서비스 인력으로서 지역사회문제 해결에 함께 참여한다는 사회적 유대감을 기대하기는 더 어렵게 한다. 그 결과 지역사회 문제를 공동체적으로 인식하고 해결을 모색하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가질 수 없게 하며,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개발하고 지속가능하도록 하는 역량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 협동조합 등을 모든 지역에 적용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시

행되고 있는 지역사회서비스의 공급과 수요의 과정은 지역사회 공동체 기반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을 위해 예산 확보와 관리감독뿐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공동체성을 세우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 참여 구조 만들기, 성과 평가 기준 재탐색, 지역사회 중심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사업명칭에서 '투자'라는 용어를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 6. 결론

본 연구는 사회복지서비스에서 그 비중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사업의 목표와 사업 내용을 구성하는 사회적 선택의 배경이 되는 가치에 초점을 맞추고 사회보장의 주요 영역으로서 사회복지서비스의 의미 있는 발전을 위해 필요로 하는 논의가 무엇인가를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산물분석틀을 이용하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내용을 분석하고 이와 함께 각 차원에서 사회적 선택의 이유를 보여줄 수 있는 가치를 축으로 분석하였다.

소득기준에 따른 서비스 대상자 선정, 주민 참여 절차가 부재하고 지역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는 프로그램, 공급인력의 전문성과 서비스 품질에 대한 문제 등으로 효과적이지 않은 서비스 전달 전략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산물이라 할 수 있는데,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영역에서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지향해야 할 가치가 반영되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의도했거나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재검토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전제로 논의해야 할 쟁점을 찾고자 하였다.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된 기존 논의가 제도를 구성하는 산물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면 본 연구는 주요 영역으로 자리를 굳혀가고 있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사회복지 가치를 실현하는데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산물보다는 오히려 출발점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사업의 목표와 가치를 검토함으

로써 지속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단기적 사업 성과를 넘어서서 공동체성 형성과 같은 복지사회 토대를 형성하는데 협력하여 기능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찾도록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제한된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는 과정에서 정책적 쟁점을 어떻게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개선에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것이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공공 주도로 사회서비스를 운영하는 바탕 위에 지역의 참여와 개입을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 무형의 성과를 가시화하여 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 발전의 동력으로 어떻게 축적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방법과 전략을 찾는 것이 추후과제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자원 투입대비 효과와 성과를 분석하거나 전문가 조사를 통한 사업의 실질적 성과와 문제에 대한 면밀한 분석 또한 추후과제라 할 수 있다.

## REFERENCES

- [1]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5, Guide to Investment in Regional Social Service, <http://www.socialservice.or.kr> (accessed Aug. 28, 2015)
- [2] E. J. Kim, "Decentralization of social service finance and policy task",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Vol. 18, No. 1, pp.219-241, 2014.
- [3] H. Y. Kim, "Growing Disparities in Social Labor: the Debate on Industrialization of Social Services in Korea",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Research*, Vol. 25, pp.115-141, 2010.
- [4] S. K. Park, "Exploratory Approach to the Regional Differences of Social Service and Accessibility",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Vol. 216, pp.65-82, 2014.
- [5] J. H. Kim, "A Study on th Publicness Crisis of the Social Service Delivery System: Focused on the Legitimacy Crisis", *Korean Society and Public Administration*, Vol. 24, No. 4, pp.187-208, 2014.
- [6] J. W. Won, M. G. Yoon, K. K. Lee,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on Social Service Budget and Program Development*, Korean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0.
- [7] E. J. Kim, "A Comparative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Service Provision Agent in Social Care Service", *Korean Society and Public Administration*, Vol. 25, No. 1, pp.169-195, 2014.
- [8] Y. J. Yoon, *Social Service Policy*, Nanumeuizip, 2011.
- [9] H. J. Nam, "The Crisis of Solidarity and its Overcome in Context of Civil Society and Social Justice-in the View of E. Durkheim, J. Habermas, J. Rawls and M. Walzer-", *Korean social security studies*, Vol. 27, No. 4, pp.137-164, 2011.
- [10] H. J. Lee, C. K. Kim, "The Implications of Social Cooperatives as a New Agency for Community Welfare Practice", *Journal of Community Welfare*, Vol. 51, pp.155-189, 2014.
- [11] Hirano Takayuki, *Community Welfare in Janpan-Policy and Methods*-(tran. Y. J. Kim, Y. M. Park), Hakjisa, 2012.
- [12] S. W. Hong, "A new Social Change and Responding Improvement of Community Social Service", *Korean Review of Crisis & Emergency Management*, Vol. 10, pp.147-171, 2014.
- [13] M. Y. Kim, S. J. Park, H. S. Kum, "The Influence of Service-Provider's Competition and Consumer's Choice on Social Service Satisfaction: Focusing on Community Service Investment Programs Service for Children", *Local Government Studies*, Vol. 15, No. 4, pp.153-176, 2011.
- [14] C. H. Shin,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Social Service Satisfaction Using Voucher",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64, No. 4, pp.137-161, 2012.
- [15] M. H. Han, "An Empirical Study on Performance of the Community Social Service Investment Program: Focusing on Effects of Intensive Management Program for the Children in Vulnerable Familie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Vol. 32, No. 1, pp.177-200, 2012.
- [16] D. A. Byeon, Y. S. Kang, "A Study on the Effect of Service Quality on Organizational Justice Community Social Investment Service Workers Recognize: Focusing on the Community Social

- Investment Service of Jeonbuk Local Autonomous Form”, Journal of Korean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Vol. 15, No. 4, pp.345-368, 2013.
- [17] Neil Gilbert and Paul Terrell.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6th ed.(tran. Chan-Seob Nam, Tae Kyun Yoo), Nanumeuizip, 2007.
- [18] M. S. Kim, K. H. Kim, S. Y. Yang, B. Ryou, “Examining the Promotive Factors of Service Collaboration in Community-based Child Care System”,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Vol. 49, pp.85-115, 2015.
- [19] B. J. Jeon, A. K. Han, “Predictors of Social Service Utilization of Elderly Using the Anderson model”,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2, No. 8, pp.19-27, 2014.

**배 화 숙(Bae, Hwa Sook)**



- 1993년 2월 :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행정학사)
- 2004년 2월 :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박사)
- 2009년 3월 ~ 현재 : 부산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사회보장, 지역사회복지
- E-Mail : peacebhs@cup.ac.kr